

탈성장 시대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정의로운 회복탄력성’으로의 전환*

한상진**

이 글은 ‘생태사회적 배제’라는 프리즘으로 인류세 등장 이후 탈성장 시대의 임박한 도래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발전 개념과 관련하여, 탈근대적 발전과 탈발전의 틀이 탈성장 지향을 어떻게 차별화하는지 검토한다. 이어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탈성장 시대에 걸맞지 않는 지속불가능한 환상임을 주장하고 그 대안으로 정의로운 회복탄력성의 구체화를 제안한다. 이러한 정의로운 회복탄력성은 탈근대적 발전의 전망에서 선진도시, 후진도시를 막론하고 거시적, 중범위적, 미시적 수준을 넘나드는 생태사회적 전환의 목표 및 지표, 실행 프로그램 등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

탈성장, 생태사회적 배제, 지속가능발전 목표, 정의로운 회복탄력성

* 이 논문은 2020년 울산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다. 소통의 공간과 통찰을 제공한 재단법인 숲과 나눔 및 생명자유공동체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울산대 교수, 사회학

I. 생태사회적 배제의 현실은 탈성장을 요구한다

이 글은 '생태사회적 배제(ecosocial exclusion)'라는 프리즘으로 인류세 등장 이후 탈성장(degrowth, 또는 postgrowth) 시대의 압박한 도래를 다루고 있다. 또 종종 '개발'과 혼용되는 발전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탈성장의 지향이 탈근대적 발전(postmodern development)인지, 아니면 탈발전(de-development)인지 검토한다. 이어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가 탈성장 시대에 걸맞지 않는 지속불가능한 환영(mirage)임을 주장하고 그 대안으로 정의로운 회복탄력성(just resilience)의 구체화를 제안하려 한다.

탈성장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21세기의 새로운 20년대를 여는 키워드다. 탈성장은 하나의 입장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2020년의 전지구적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일상적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한겨레신문(2019.10.25., “하반기에도 회복 안 되는 경제… ‘1%대 성장’ 현실이 되나”)은 2019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09년 세계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1%대에 머무르리라는 전망을 비관적 논조로 다루면서도, 성장률 2%와 1.9%는 GDP 1조 8천억원의 차이로 개인 삶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한상진(2018ㄴ: 77-84)은 서구의 탈성장 접근을 영어권 정상상태(steady-state) 경제론, 독일의 성장 이후(postgrowth) 담론, 프랑스 및 남유럽에서의 탈발전 논의 등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앞의 두 접근은 이 글에서의 탈근대적 발전 지향으로 아우를 수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1972년 유엔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낸 직후 1973년 중동에서 발생한 1차 석유위기가 세계경제를 뒤흔들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 이전까지 경제성장을 위한 원료로 취급되었던 석유가 자연생태계의 한계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지되면서, 빈

곤을 해결하기 위한 서구의 복지국가 실험이 신자유주의적 민영화에 의해 저지되고 서구, 비서구 가릴 것 없는 사회적 배제의 심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1970년대 초부터 21세기 초까지의 시대적 특징을 <근대화 및 지속가능 발전 담론에 의한 생태사회적 배제의 악화>로 규정한다.

17세기 인류세 등장과 서구에서의 지리상 발견 이후 인간 및 동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생태적 배제의 과정이 시작되었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야 사회적 배제가 인간 빈곤의 기제로 주목받게 된 것과 비슷하게 생태적 배제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정복'이라는 이름 아래 오랫동안 은폐되어 왔다. 이 시기 미국에서 벌어진 아메리카 원주민의 생태사회적 멸종과 흑인 아프리카 출신 노예에 대한 동물 수준의 대우를 생각해 보라. 어쨌든 시대 구분을 해 보면 17세기 이후 대략 19세기 중반까지는 <인류세 등장 이후 서구 중심의 성장과 생태적 배제의 시동>을 특징으로 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정통 근대라 불릴만한 19세기 중반 이후 1960년대까지는 어떤 특성을 갖는가? 이 글은 이 시대를 <비서구의 식민지 근대화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지구화(서구의 성장과 생태적 배제는 지속되는 가운데)>로 파악한다. 물론 서구적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 후반기에 발생한 사회주의 혁명과 양차 대전, 그 후의 사회민주주의 복지노선 등이 빈곤과 불평등에 맞서는 포용의 과정이었다고 파악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서구에 의한 비서구 식민화가 생태적 배제의 가속화 속에서 지구 차원의 사회적 배제를 촉발해 온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70년대 초 '성장의 한계'가 세계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선진국은 탈성장 노선을 고민하기보다 비서구에서의 빈곤을 지구 환경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고려하는 '지속가능 발전' 개념을 고안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소수의 목소리였지만, 리우

회의에서 이 개념이 공식화된 시점인 1992년에 캐나다 퀘벡주에서 개최된 ‘발전에 대한 문화적 대안 국제 네트워크’ 선언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발전의 종식’을 요구했다(라투슈, 2015: 89-91).

그것은 첫째 발전 프로젝트를 위해 남반구 국가들이 진 모든 빛을 1년에 20%씩 점진적으로 탕감할 것, 둘째 북반구 국가의 1인당 소득을 1960년 수준으로 축소할 것, 셋째 적절한 수단을 통해 석유의 무제한 사용을 중지할 것, 넷째 10만년 만기의 모든 핵발전소를 취소가능한 속도로만 사용하여 전력량을 줄일 것, 다섯째 문화적, 자연적 환경과 조화로운 지역공동체 교육체계를 활성화할 것, 여섯째 남반구 엘리트를 대상으로 발전 및 GDP의 허구성이나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도록 교육할 것, 일곱째 발전을 지원하는 담당 부처를 지방분권화된 협동조합으로 변모시킬 것 등이다.

이러한 권고는 이미 28년 전에 탈성장 노선이 급진적으로 모색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서구에서 비서구 전체로 확대되어 간 시장 중심의 경제성장 교의는 이 같은 목소리를 ‘지속가능’이라는 모호한 수식어로 덮어 버렸다. 또한 1990년대 말 일자리에 주목하여 주창된 ‘제3의 길’이 생태복지 전략을 행동강령에 포함시켰다면, 현재 수준의 생태사회적 배제는 어느 정도 저감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글은 현재의 기후위기가 근본적으로 지구 스케일을 능가하는 시장의 글로벌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파악한다. 그렇지만 탈성장이 발전의 종식(탈발전)일지, 근대화론에 근거한 지속가능 발전 노선으로부터의 탈각(탈근대적 발전)일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II. 탈성장은 탈근대적 발전인가, 탈발전인가?

근대화 담론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조국 근대화'로부터 현재에도 맹위를 떨치는 생태근대론(ecomodernism)에 이르기까지 삶의 저변과 대안적 환경 담론을 아우르는 실재이다. 근대화는 산업화, 도시화와 맥을 같이 하는 서구화의 과정이며 근대경제학의 성장 신화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칼리스(Kallis, 2017: 52-58)는 생태근대론의 오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태근대론은) 도시가 농촌보다 물질적 욕구의 효율적 제공과 환경적 영향의 감소를 더 잘 수행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효율성은 스케일¹⁾과 혼동되고 있다. 도시는 생산물 단위당 자원을 덜 사용할지 몰라도, 총체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생산, 사용한다. (...) 자본주의 아래 자연은 방치되지 않는다. 자연이 일시적으로 방치되어 저렴해지면, 소비 측면의 혁신, 광고 등에 의해 새로운 욕구가 창조되어 잉여 자연이 관광 등 이윤창출적 용도에 노출된다.

나아가 센(김원기 역, 2013: 83-85)은 발전을 둘러싸고 더 많은 피와 땀, 눈물을 동반하는 난폭한 과정이라는 시각과 그 과정이 조화롭고 본질적으로 우호적이라는 시각이 병존함을 지적한다. 전자의 개념화로는 라투슈(2015: 26-28)의 '탈발전' 논의가 대표적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성을 개발하게 해주고 자신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존엄하고도 개화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이행과정'으로서의 발전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이룩된 적이 없다. 라투슈는 발전 자체가 세계의 서구화나 훌륭한 성장 등을 포장하는 일종의 개념적 사기라고 보는 셈이

1) 데일리(2016: 95)에 의하면, 스케일이란 '인구 X 일인당 자원 사용'으로 측정되는 생태계 내 인간존재의 물질적 규모, 또는 크기의 약식 표현이다.

다. 반면에 센은 후자의 용법을 선호하여, 발전에 대해 사람들이 향유하는 실질적 자유가 확장되는 과정이라 파악하고 있다. 특히 그는 자유의 구성적, 도구적 역할을 구별하면서, 자유와 권리가 경제발전에도 효율적으로 기여한다는 도구적 주장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실질적 자유의 구성적 측면에 관심을 갖는다.

필자가 보기에 센의 관점은 경제적 용이성이라는 도구에 초점을 맞추는 ‘근대적 발전관’과 달리 인간 자유의 내재적 중요성을 발전의 최우선적 목표로 강조하는 ‘탈근대적 발전’의 입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2020년대를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생태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는 탈성장 노선은 탈발전보다는 탈근대적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어 탐구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필자는 포스트 성장(post-growth)의 관점에서 성장 이후 대안적 발전을 우선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를 위한 정상(定常)상태 경제의 적극적 실행이 지체될 경우 원하든 원치 않든 탈발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조효제(2019)는 한국의 발전국가 지향이 제1세계 케인즈주의형 복지국가와 제2세계 국가사회주의형 산업국가의 장점을 취하기 위한 국민경제 기획이었다고 하면서, 개발주의에 맞서 대안적 발전권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도출하고 있다. 그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경제성장 자체가 아니라 경제환원주의와 서구 중심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대안적 발전권에 대한 그의 제안은 경제성장 자체의 지구적 한계를 간과함으로써, 탈근대적 발전 논리에 미치지 못하는 근대적 접근에 머무르고 있다. 그는 경제개발과 경제성장이 가치중립적이라고 보는 실증주의 관점을 비판할 뿐, 지속가능 발전 담론이 결과하고 있는 ‘서구 수준 환경보전에 이르기 위한 비서구에서의 성장을 향한 질주’의 문제점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한상진(2018ㄱ)은 '복지에서 노동으로(from welfare to work)'를 주창해 온 서구 중심의 제3의 길 담론에 반대하여 '한국형 제3의 길(Korean third way)'을 탐색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비서구의 경우 애초에 일자리 초점으로 전환시킬 복지국가 경험의 부재하므로, 일을 통한 복지의 세계화는 서구적 근대화가 아닌 복지와 노동의 동시적 추구라는 새로운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형 제3의 길'의 경로는 보편적 복지와 사회적 경제의 결합, 제3섹터 주도의 속의 민주주의, 좌와 우를 넘어서는 녹색 대안 등으로 요약된다. 이는 '지구적 제3의 길'의 한국 버전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에 걸친 탈근대적 발전의 노선이라고 확대 해석 가능하다.

먼저 '보편적 복지와 사회적 경제의 결합'은 한국과 같은 비서구에서 일자리 부족의 대응이 복지 확대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탈근대적 발전 요소와 연결해 본다면, 생태사회적 배제가 지방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의 정의로운 재분배를 통해 극복되어야 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 '제3섹터 주도의 속의 민주주의'는 지구 전체에 걸쳐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섹터 커먼즈(common)의 주도 아래 공(公)-사(私)-공(共)협치의 절차적 정의가 확립되어야 하는 측면이다. 이와 함께 '좌와 우를 넘어서는 녹색의 대안'은 근대화론의 양대 축인 국가 사회주의와 시장 자본주의 둘 다를 지양하는 제3의 길을 의미한다.

생태사회적 배제라는 생태적, 사회적 배제의 동시화는 근대화론에 입각한 지속가능 발전이 더 이상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해 왔다. 이 글은 탈근대적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려는 차원에서, SDGs의 발상이 지속불가능한 환영(幻影)에 기반하고 있음을 쟁점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필자는 제3섹터 주도의 녹색 대안이 사회적 경제, 보편적 복지라는 주류 정치의 의제로 침투되지 않는다면, 제1세계, 제3세계 할 것 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탈발전의 득세에 직면하리라 예측한다. 탈발전

지향은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쿠바의 탈석유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실험된 바 있어서, 비현실적이라 치부할 수 없는 현 실태이기도 하다.

Ⅲ. SDGs는 지속불가능한 환영이다?

1. 지속가능 발전 개념의 지속불가능성

칼리스가 언급한 생태근대론의 ‘효율성과 스케일의 혼동’은 지속가능한 재생산 차원에서 음미할 필요가 있다. 18세기까지, 또 현재에도 제3세계에서는 농민들이 자연의 포식자가 아니라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 왔고 또 살고 있다. 근대경제학은 ‘투입 대비 산출 증가’로 정의되는 효율성을 둘러싸고 투입 감소가 아닌 산출 증가라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만 몰두해 왔다. 근대화의 환상은 경제 바깥에 존재하는 환경이라는 경계선을 간과한 채, 지구 스케일을 넘어서까지 효율적 성장이 가능한 것처럼 오도한다.²⁾ 경제적 투입이 어디서 오고 폐기물 산출이 어디로 가는지를 현실적으로 인지하는 순간, 경제학의 희소성 인식은 비유하자면 ‘어선’에서부터 ‘바다에 남아있는 물고기 수’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데일리, 2016: 24).

고전파 경제학자인 밀(Mill)은 자본과 인구의 정상상태가 인류 발전의 정상상태가 아니며 오히려 인간 정신이 지속적 성장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날 때 삶의 방식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데일리, 2016: 16). 그에 의하면, 정상상태란 인구와 물질 자본이 제로성장 상태이지만 기

2) 데일리(2016: 13)는 진정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인구 및 생산의 성장이 자원 재생과 폐기물 흡수라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역량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만약 그 지점에 도달한다면 생산 및 재생산은 사용한 것을 대체하는 수준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질적 향상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물질적 성장은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술과 윤리는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논법은 쉐의 실질적 자유로서의 발전이라는 발상과도 비슷하다. 그 연장선 위에서 데일리(2016: 20)는 1992년 세계은행의 '개발과 환경' 보고서가 환경악화의 주요 원인을 빈곤으로 파악하여 더 많이 성장할 때 지속가능 발전의 물질 기반이 확보된다는 잘못된 가정을 배태했다고 갈파한다.

한편 탈발전의 관점에서 있는 라투슈(2015: 56)는 데일리가 발전 개념을 정상상태 경제, 또는 제로성장에 의거해 접근하려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는 데일리의 스승인 제오르제스쿠-로에젠의 “지속(가능) 발전은 그 어떤 경우에도 경제성장과 분리될 수 없다. 발전이 성장과 반드시 연루될 필요가 없다고 그 누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언급을 인용하면서, 탈근대적 발전의 전망에 반대하고 있다. 라투슈(2015: 55)의 입장은 “오늘날까지 모든 국가가 따르는 발전 모델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둘러싼 궤변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지속불가능하다”라는 국제기후 전문가 그룹 회원의 인용구로 대변된다. 물론 그는 지속가능하다는 것이 인간 활동이 생태계의 재생 능력보다 더 높은 오염 수준을 만들어내지 말아야함을 의미한다고 인정하기는 한다.

김민재 외(2018: 10-12)는 현재의 지배적인 구조 및 제도가 지속가능성 전환을 가로막는 '지속불가능성의 정치'에 의해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들은 지속가능 발전 개념의 모호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개념의 모호함 자체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다소 모호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지속가능성 전환이란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 사회, 경제 및 정치의 장기적 전환 과정'이라고 정의되는데, 필자가 보기에 이는 '탈탄소 전환'(Vincens, 2016)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글은 김민재 외(2018: 11)가 인용하듯 '지속가능성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실천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해석은 일련의 정치적 과정'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그러

한 정치적 과정이 선진국과 선진도시 등 근대화 수혜지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2. SDGs에서 발견되는 근대화론의 영향

한겨레신문(2019.10.7., “한국형 지속가능 발전목표 어디쯤 가고 있나”)에 따르면, 2015년 유엔이 권장한 17개 SDGs와 관련하여 한국은 2018년 말에야 K-SDGs를 수립하는 등 뒤늦게 대응해 왔다. 이 기사는 환경부가 조직한 K-SDGs의 목표별 민간 이해관계자 그룹 124명 가운데 삼성, 포스코 외의 기업 참여가 없음을 비판한다. 그런데 외국의 모범적 기업참여 사례인 구글, 알리바바 등이 수행하는 SDGs 이행에 필요한 데이터 취합이나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데이터 작업에 대한 지원은 다른 한편으로 장기적 이윤 창출의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의 라투슈 입장에서 보면, 기업은 원천적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보장하지 않는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보전 등에 우호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탈근대적 발전의 전망에서 볼 때, 17개 SDGs 중 근대화론의 영향이 두드러지는 지표는 빈곤퇴치, 기아종식,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이하 일자리성장), 산업혁신 및 사회기반시설(이하 산업기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등으로 식별된다. 이들 지표는 나머지 12개 지표와 종종 -의 관계로 나타나는데, 예컨대 빈곤, 기아의 경우 불균등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볼 수 있는데도 그 해결을 위해 경제성장이 다시 제시되는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다.

물론 빈곤과 기아는 생태사회적 배제의 주요 결과로서 생태계 회복과 함께 극복되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경제성장과 근대화라는 위로부터의 서구적 관점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다양한 생태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³⁾ 근대화론 발상이 더욱 명확한 일자리성장, 산업기반 등 두 가지 SDGs의 세부 목표들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자리

성장과 관련한 세부목표 가운데 “나라별 상황에 맞추어 1인당 경제성장을 지속화하고 특히 최빈국에서 GDP 증가율을 연간 7% 이상으로 지속”한다든지 산업기반 세부목표 중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추진하고 2030년까지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 및 GDP에서 공업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최빈국에서 공업의 비중을 2배로 증가”하겠다는 설정(통계개발원 외, 2016에서 재인용)은 생태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는 탈성장의 전략과 전면으로 배치된다.

펠로우(Pellow, 2018: 274)는 지속가능성 담론이 사회정의에 근거한 학제적 맥락, 역사, 행동 및 대화 내에서 상황지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의 실행을 목표로 하는 노력이란 제한적일 뿐이며 실제로 지속불가능하다고 밝힌다. 그에 의하면, 지속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정의 및 다양한 지식습득 방식의 포용성이다. 현재 지구 곳곳에서는 이들 간 연계와 관련된 ‘상황 지어진 지속가능성(situated sustainability)’을 간과하는 파국적 상황이 빈발하고 있다. 그 예로는 미국, 남미 등의 국립공원 조성 차원에서의 보전 추구가 원주민의 추방을 낳는 것이나, 군사적 국가관행 및 기업의 생명지지 체계에 대한 주된 위협은 차치한 채 인구 증가가 생태계에 대한 최대 위협임을 내세워 저소득 노동계급 이민자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3) 빈곤을 뛰어넘어 내핍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실질적 자유’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시민에게 체질화되기는 어려운 것인가? 오수길(2019)이 서울 거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7개 SDGs 중 우선순위와 목표의 중요도 면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이 각각 46.9%, 40.8%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IV. 회복탄력성 개념과 정의로운 회복탄력성의 지향

1. 회복탄력성에 대한 개념적 검토

회복탄력성은 1973년 홀링(Holling)이 생태학의 맥락에서 처음 소개한 용어로, 체계 내 관계의 지속성, 또는 변화와 교란을 흡수하고 변수들 사이에 동일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위커 외(2015)에 따르면, 회복탄력성의 가치는 다양성, 생태적 변이, 모듈화, 느린 변수의 인정, 견고한 피드백, 사회자본, 혁신, 다중 이해당사자 거버넌스, 생태계 서비스 등을 지향하고 있다.

이 때 다양성이란 모든 형태의 생물적, 지리적, 사회경제적 다양성을 증진, 지탱함을 가리키며, 생태적 변이를 둘러싸고 있는 통제, 감소의 대상이라기보다 수용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권고된다. 또 모듈화란 한 구성 요소가 나머지 요소와 모두 연결될 필요는 없다는 전제 아래 과잉연결 체계 대신 자율성의 유지에 초점을 맞춘다. 느린 변수의 인정은 사회-생태계 붕괴를 방지하는 문턱(threshold)의 관리를 통해 교란을 더 많이 흡수하여 바람직한 체계의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견고한 피드백이란 문턱을 넘어서기 전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환류과정으로서 기후위기 등을 방지하는 효과를 지닌다. 또한 사회자본은 구성원 간 신뢰, 잘 형성된 사회관계망, 적응적 지도력의 증진과 관련되며, 혁신이란 새로운 학습, 실험을 통한 자체적 규칙 설정과 변화에 대한 수용을 의미한다. 나아가 다중 이해당사자 거버넌스는 하향식 협치보다 공/사를 포괄하는 복합 개념으로서의 커먼즈 접근의 맥락에 있다. 끝으로 생태계 서비스란 사회체계가 생태계에 대해 갖는 자원관리의 댓가로 자연생태계가 인간 사회를 쾌적하게 만드는 각종 서비스를 일컫는다.

빅스(Biggs et al., 2015)는 사회-생태계의 생태계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회복탄력성 원칙으로, 첫째 다양성과 여분(redundancy)의 유지,

둘째 연계성의 관리, 셋째 느린 변수 및 피드백의 관리, 넷째 복합적 적응체계 사고의 증진, 다섯째 학습의 격려, 여섯째 참여의 확장, 일곱째 다중심적 거버넌스 체계 촉진 등을 적시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회복탄력성의 지향은 지속가능 발전 개념에 비해 사회-생태계라는 인간사회와 자연생태계의 상호작용 관점이 더욱 명확하며, 지구의 문턱을 위협하는 경제성장에 대해서도 뚜렷한 규제적 입장을 나타낸다. 현재 세계적으로 알려진 회복탄력성 지표로는 록펠러 재단이 2015년에 공표한 도시 회복탄력성 틀(City Resilience Framework; 이하 CRF)이 대표적이다.

CRF 가운데 생태사회적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목표로는 노출 및 균열의 감소, 핵심 서비스의 효과적 공급, 신뢰할만한 커뮤니케이션 및 모빌리티 등이 있다. 우선 노출 및 균열의 감소를 위해서는 환경지킴이 정신(stewardship), 적절한 하부구조, 효과적 토지이용 계획, 계획규제의 실행 등의 지표가 요구된다. 또 핵심 서비스의 효과적 공급을 위한 지표로는 다양한 공급과 적극적 관리, 생태계 하부구조의 유지, 우발적(contingent) 계획 등이 거론되고, 신뢰할만한 커뮤니케이션 및 모빌리티의 지표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다중모드 교통체계 및 정보통신기술망 등이 포함되어 있다. 록펠러재단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세계 100개 도시와 협력하여 회복탄력성 틀을 실제 도시정책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한 시도 자체는 선구적이고 유의미한 것이지만, 특히 커뮤니케이션 및 모빌리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기술체계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접근의 한계 때문에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불의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된다.

2. SDGs와 정의로운 회복탄력성 개념의 대비

펠로우(Pellow, 2018: 275-276)는 생태계 위기가 심화될수록 불의한

회복탄력성의 시도도 빈번할 것이므로 그것과 구별되는 ‘정의로운 회복탄력성’의 개념화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오히려 불의한 회복탄력성은 사회적, 생태적으로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관행,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한편 정의로운 지속가능성이란 환경정의와 지속가능성을 개념적으로 접합한 것일 뿐, 현존하는 지구 위기와 위협에 직면한 지역사회의 되튐 및 재건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못한다. 지구적, 지방적 스케일에서의 정의로운 회복탄력성 추구는 자연생태계 여지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수준의 탈성장 전략과 각 전략별 분배적, 절차적, 승인적 정의의 원칙과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2015년 UN이 발표한 17개 SDGs 가운데 정의로운 회복탄력성으로 연계될 수 있는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 거주지 조성’,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한 긴급조치 시행’, ‘해양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 등과 같은 목표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통계개발원 외, 2016)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세부목표를 검토해 보면,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 개발계획을 강화함으로써 도시-근교도시-지방 간 경제, 사회, 환경에 걸친 긍정적 영향을 확대”한다든지 “소규모 어업의 해양 자원 및 시장으로의 접근을 확대”하는 등의 성장지향적 근대화론 발상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기후변화 대처 조치라는 SDGs의 세부 목표로서 “모든 국가에서 기후관련 위협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과 적응역량을 강화”한다고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회복탄력성의 생태사회적 구축 전략이 정의로운 분배, 절차, 승인 차원으로 접맥되고 있지 못하다. 한국의 경우 UN의 SDGs에 입각하여 2018년에 국가 SDGs가 확정되고 서울, 광주, 경기, 충북, 충남 등 지방 SDGs까지 수립, 실행되는 추세이지만(양준화, 2019), 탈근대적 발전 지향과 회복탄력성 역량에 바탕을 둔 참여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거버넌스의 문제점이 여전히

다고 볼 수 있다.

이상현(2018: 70-71)은 서울시 에너지, 교통, 폐기물 등의 전환 정책에 대해, 사회-기술 체계의 미시적 수준에서 부분적 성과가 있었지만 거시적, 중범위 수준의 구조적 변화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그로 인해 더 큰 스케일에서의 정책 거버넌스 체계와 연결하지 못함으로써,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따른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성도 지적되고 있다. 즉 정의로운 회복탄력성의 지향은 탈근대적 전망에서 선진국 도시, 후진국 도시를 막론하고 거시적, 중범위적, 미시적 수준을 넘나드는 생태사회적 전환(ecosocial transition)의 목표 및 지표, 실행 프로그램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하겠다. 또 이는 제3세계와 빈곤층(및 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생태적 위험의 재분배와 함께, 인간 너머 존재까지 포괄하는 커먼즈에 의한 국가(및 지자체)의 승인적 절차에 따른 재구성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민재 외, 2018, “지속가능성 전환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 정책 평가”, 『에코』 22권 2호, 7-40쪽.
- 데일리, H., 박형준 역, 2016, 『성장을 넘어서』, 열린책들.
- 라투슈, S., 이상빈 역, 2015, 『발전에서 살아남기』, 민음사.
- 센, A., 김원기 역, 2013, 『자유로서의 발전』, 갈라파고스.
- 양준화, 2019, “SDGs UN-국가-지방 이행현황과 과제”, SDGs 이행 국회토론회 자료집.
- 오수길, 2019, “서울시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생태적 전환”, 서울특별시 심포지움 자료집, 『GDP를 넘어 생태적 전환으로』, 9월 26일-27일.
- 워커, B. 외, 고려대학교 오정 에코 리질리언스 연구원 역, 2015, 『리질리언스 사고』, 지오북.
- 이상현, 2018, “서울시 전환 정책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에코』 22권 2호, 41-76쪽.
- 조효제, 2019, “경제개발에서 발전권으로”, 한겨레신문, 10월 30일자.
- 통계개발원·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6, 『SDGs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I 해설 편』.
- 한상진, 2018, 『한국형 제3의 길을 통한 생태복지국가의 탐색』, 한국문화사.
- 한상진, 2018, “탈성장 접근과 중강도 지속가능성의 탐색” 『에코』 22권 1호, 75-102쪽.
- Biggs, R. et al., 2015, *Principles for Building Resil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llis, G., 2017, *In Defense of Degrowth*, Uneven Earth Press.
- Pellow, D.N. 2018, “From More than Just Sustainability to a More Just Resilience”, Sze, J.(ed.), *Sustainability*, NYU Press, pp. 271-277.
- Rockefeller Foundation, 2015, “City Resilience Framework”, <https://assets.rockefellerfoundation/app/uploads/20140410162455/City-Resilience-Framework-2015.pdf>.
- Vincens, J. 2016, “Social Actions Transformed in a Post-Carbon Transition”, Garcia, E. et al.(eds.), *Transitioning to a Post-Carbon Society*, Palgrave Macmillan, pp. 249-266.

Abstract

The Transition from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o Just Resilience in the Era of Ecosocial Exclusion

Sangjin Hahn

(Professor of University of Ulsan, Sociology)

This paper deals with the emerging 'postgrowth' age long after the appearance of anthropocene on the basis of ecosocial exclusion prism.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development, it examines differential influences of each framework of 'postmodern development' or 'de-development' to the orientation for degrowth. It is argued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ed by UN may be 'unsustainable' mirages which would collide with the values of postgrowth, and that we should make concrete the alternative concept of 'just resilience'. Its operational definition needs the index-making and execution of ecosocial transition programs in the context of the vision of postmodern development.

Key Words: degrowth(postgrowth), ecosocial exclusi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just resilience

논문신청일: 2020.03.31.

논문심사일: 2020.04.14.

게재확정일: 2020.04.22.